

社說

과죽지세 코스피 7000 돌파, '반도체 풀림'이 숙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대에 진입했다. 지난 2월 6000 선을 돌파한 지 70일 만이지만, 중동 전쟁으로 5000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6000선을 회복한 4월 15일 이후로는 21일 만이다. 올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75%로, 4개월여 만에 지난해 연간 상승률과 같아졌다. 과죽지세라는 표현대로 주식 시장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있다.

코스피 급등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혁명이 낳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 혼풍을 타고 올 들어서만 각각 120%, 140% 넘게 올랐다. 두 회사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약 47%)을 감안하면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70% 이상을 두 회사가 담당할 것이다. 두 회사의 실적 개선 효과만으로도 올해 코스피가 8000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 맞춰 나온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대책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각종 증시 부조리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었지만 이 불신이 해소되기 시작하고 시장의 신뢰가 쌓이자 폭발적 상승을 가져왔다.

코스피 7000은 한국 증시 역사를 새로 쓴 이정표지만, 그 이면엔 짙어붙어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반도체 풀림에 의한 착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가 흔들리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가 커졌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확연히 갈리는 증시 양극화도 심화됐다. 어제 코스피가 6% 넘게 올랐지만, 하락 종목이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넘었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은 코스닥시장은 오히려 하락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은 1.7%였지만, 반도체를 빼면 0.8%로 떨어진다. 증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반도체 풀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증시와 실물 경기의 괴리도 크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이지만 고통을 내수 침체로 서민 경제는 겨울이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1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고유가·고환율에 이어 고물가까지 3고(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증시 호황이 소비를 늘리고 기업 투자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작동하지 않는다.

코스피 7000이 반짝 상승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와야 한다. 대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이 급선무다. 단계적으로 고통스럽겠지만 준비 기업 퇴출과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AI·바이오·차세대 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국가적 지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는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다.

민주당 후보들도 만류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민주당 이상호 강원지사 후보가 6일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포함해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4월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깨닫는다"고 말했다. 문제의 특검법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셀프 면죄부' 논란을 일으켰다. 우 후보 얘기는 반대 여론이 높아지며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조작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조작이 밝혀졌다"며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했고 5월 중 처리를 공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 후보들이 '공소 취소 특검' 반대를 명분으로 야권 연대를 추진했고, 민주당 후보들조차 지방선거를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우군인 진보·좌파 법학계조차 대통령이 자기 사건 재판관을 선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도 진영 내부의 반발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특검법 내용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권을 갖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선거 이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도 공소 취소 특검이 무리수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12건이고 이 중 8건은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특검에는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국회에서 재논의한다면 수사 대상과 권한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 다수를 장악한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 재논의할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만 재논의한다는 등의 선거용 위기 모면이 아니라 위헌성과 삼권분립 훼손을 초래할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무리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느닷없는 특검 '한동훈 출국 금지' 수사 아닌 정치

2차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출국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송금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전 대표가 고발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출국 기간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 12일까지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이재명 죽이기 조작 수사'를 했다고 고발했다고 한다.

출국 금지의 해외 도주 우려가 큰 피의자의 발을 묶기 위한 조치다. 수사 기관 요청으로 법무부가 결정한다. 그런데 특검의 출국 요청 시기는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고 지역에 전선집을 계약한 때였다. 선거 출마자가 해외 도주할까 봐 출국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한 해 고소·고발 사건이 50만건을 넘는다. 특검 명대로 "고발장 접수 때문"이라면 매년 수십만 명의 국민이 출국 당해야 한다.

민주당이 쌍방울의 '이 대통령 방북비' 송금 사건이 조작이

라며 국정조사를 강행했을 때 한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못 나오게 막았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상 고른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수사한다며 출국 금지를 했다. 앞뒤도 안 맞는다.

올 초 2차 특검은 내란 등 3대 특검이 6개월 동안 살살이 수사해 기소까지 마친 사안을 또 뒤지겠다고 출범했다. 그래서 지방선거용 '정치 특검'이란 말이 많았다. 실제 2차 특검은 수사를 하기도 전에 대북 송금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보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윤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곧 원하는 장면을 보시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대북 송금 수사 총괄 특검보는 핵심 당사자인 이화영씨의 과거 다른 사건 변호인으로 드러나기까지 했다. 이제 선거가 다가오자 더 노골적이다. 이렇다간 언젠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판이다.

'지방'에 필요한 건 공장·예산이 아니다

에스프레소



조귀동

경제칼럼니스트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중) 광주 이전 법안은 못매를 맞았다. 별다른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한예중을 보내겠다는 정치 논리라는 비판이었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논리였다. 대학교 하나 내려보내려고 지역의 문화산업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수도권 인적 네트워크에서 지리적으로 단절되면 대학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예측은 설득력 있다.

그런데 비판자들이 제시하는 논리가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밖 지방이 죽어가는 이유는 문화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성장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예중 자리에 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인간의 지식과 창의성이 중요한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가져다놓아도 비판 논리는 비슷하게 전개될 터이다.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로 서울은 줄곧 '머리(구상 노동)' 역할을, 지방은 '손발(실행 노동)' 역할을 각각 맡았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고, 고부가가치에서 직접 생산이 차지하는 몫이 줄면서 지방 경제도 가라앉게 됐다. 부산·울산·경남에 있던 연구소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옮겨오는 등 이제 서울은 유일한 '머리'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지방의 몰락은 그간의 공간적 분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예중 이전 법안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보면서 지방 사람들이 적잖이 불편한 건 이 때문이다. '수도권의 배운 분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공장 이전이나 대규모 예산 지원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제조업만 해도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구개발·디자인·유지보수·각종 컨설팅 등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모델 및 인프라, 콘텐츠, 헬스케어, 첨단 제조, 보안·네트워크·양자 등인 계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해 12대 분야 벤처 투자의 79.1%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의 정주 여건도 서비스업과 떼어놓을 수 없다. 좋은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갤러리, 다양한 사람과 만날 기회 같은 에메니티(편의 환경)가 결정적인 변수다. 에메니티는 공공이 만들어줄 수 없다. 지역 내에 일정 규모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지방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반도체 공장이나 공공기관, 예산 폭탄이 아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두 곳이라도 충분하다. 고숙련·고기능 인력이 모여 살 만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들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과 같은 성공 사례가 여럿 있다.

한예중 이전이 무리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도 한예중이 살아남을 도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도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 구조와 인적자본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다.

한예중 광주 이전 논란인데 왜 지방엔 문화산업 인프라 없나 지방 몰락은 공간 분업의 결과 균형발전 담론을 바꿔야 한다

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전현배·허정·서강대 교수는 2008~2013년 한국 제조업체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 생산 기지를 두고 수출입을 병행할수록 서비스화가 더 심화했다고 지적한다. 지방에 내려갈 만한 공장 수는 줄고, 제조업체들은 다양한 분야의 고숙련 인력을 필요로 한다. 최근 반도체 공장 이전 논쟁이 보여주듯이, 첨단 산업의 지방행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성장률이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산업은 예외 없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비율이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12대 신산업 분야가 AI

모델 및 인프라, 콘텐츠, 헬스케어, 첨단 제조, 보안·네트워크·양자 등인 계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지난해 12대 분야 벤처 투자의 79.1%가 수도권에 몰렸다. 지역의 정주 여건도 서비스업과 떼어놓을 수 없다. 좋은 식당과 카페, 공연장과 갤러리, 다양한 사람과 만날 기회 같은 에메니티(편의 환경)가 결정적인 변수다. 에메니티는 공공이 만들어줄 수 없다. 지역 내에 일정 규모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다.

한예중 이전이 무리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도 한예중이 살아남을 도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도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 구조와 인적자본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다.

한예중 이전이 무리수라는 비판은 일리가 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지방의 절망을 들여다보고, 그곳에서도 한예중이 살아남을 도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다. 지방도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 구조와 인적자본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방의 탐욕과 어리석음만 규탄한다면 다른 형태의 서울 중심주의일 뿐이다.

이미지의 아라비안 舞飛 나이트 [10]

자신이 바다임을 깨닫는 파도

스물 남짓한 여인 소녀가 기차역에서 소설책을 떨어뜨립니다. 제목은 '거장과 마르가리타'. 또래 청년 오토가 건너편 플랫폼에서 뛰어 무임승차합니다. 주운 책을 갖다주려는 겁니다. '오토라는 남자(A Man Called Otto·사진)'에서 이 책이 돌을 부부로 맺어줍니다. 40여 년 후, 오토는 책 주인공 마르가리타처럼 강인했고 늘 총천연색 삶의 태도로 빛났던 소녀를 추모합니다. 반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그는 이제 누구와도 담 쌓을 만치 마음이 허락됩니다. 아내와의 재회를 앞당기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오토. 의식이 흐려질 때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아내가 나타나 막습니다. 한편 남미계 주

부 마리솔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웃 사랑은 구원투수 베키가서 그가 위험해질 때마다 절묘하게 개입합니다. 하루는 딸아이가 그랬다며 선물합니다. 나란히 손잡는 가족 그림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파도라고 믿느라 거대한 바다이기도 하다는 걸 망각하곤 한다(It is easy to believe we are each waves and forget we are also the ocean).' 미국 어린이책 작가·삽화가 존 무스의 은유입니다. 불교 지도자 틱낫한의 이 통찰에 영감을 얻은 글 같습니다. '깨달음이란 파도가 자신이 바다임을 깨닫는 것이다(Enlightenment is when a wave realizes it is the ocean).' 아이 그림에서 자기만 총천연색이란 걸 발견한 오토가 달라집니다. 작가·외화번역가



다. 소멸을 두려워하는 파도인 줄 알았던 자신이 이웃과 망망하게 연결된 바다임을 깨닫는 겁니다.

미하일 불가코프의 앞 소설엔 전자에 무임승차하는 고양이가, 영화엔 오토 집 주위를 맴도는 길고양이가 나옵니다. 녀석을 줄곧 내쳤던 오토가 무임 입주를 허락합니다. 이즈음부터 그의 무체색 삶이 총천연색으로 바뀝니다. 노인들을 편법으로 내쫓는 개발업자를 상대할 땐 영락없는 파수꾼 오토입니다. 그렇게 이웃과 더 끈끈한 바다가 돼갑니다. 작가·외화번역가

자본주의-자유시장경제-주식회사 제도 흔들 삼성전자 파업 ... 황금알 낳는 거위, 가위로 배 가르잔다

뉴데일리 newdaily.co.kr

위험한 자본 투자는 주주가 감수 노조가 감수한 위험은 무엇? 이익 배분구조 변경요구는 사회주의 하자는 것

조폭보다 더 센 노조

언젠가 <노조 + 조폭 = 노폭>이란 말이 유행했었다. 하나 문자, 노조와 조폭, 누가 더 강할까? 노조다. 명분을 통해 체를 불리기 쉬워서다. 몇십만 명도 모을 수 있다.

한자어 <권력(權力)>을 한글로 풀면 <주먹 힘>이다. 법보다 주먹이 강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주먹>이 아니라 <머릿수>로부터 나온다. 노동자는 약하지만, 노조는 강하다. 노조는 권력이다.

그 권력의 원천은 단체교섭이다.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에 나서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교섭에 나서는 건 차원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 교섭력이 무한히 작아진다. 후자의 경우, 교섭력이 무한히 커진다.

한국경제에 드리운 암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려는 시도다. 한국 경제를 향한 <최후통첩>이다. 위기가 드리우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경제의 주축이다. 코스피를 떠받치고, 수출과 세수, 심지어는 연금 수익률과도 연결된다. <국민 소득 인프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산업 파업은 국가 경제를 통째로 흔들 수 있다. 투



자자들은 <파업> 가능성을 큰 <리스크>로 받아들인다. 생산 차질과 비용 상승, 납기 불확실성 때문이다. 그 결과는 단순한 주가 조정으로 끝나지 않고 <외국 자본 이탈·환율 변동성 확대·중증 전반의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성장 엔진에 대한 충격>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① 선제 투자 ② 규모의 경제 ③ 공급망 신뢰가 핵심이다. 파업은 이 세 요소를 동시에 흔든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고객은 대체 공급선을 찾고, 이는 장기적인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다. <이익 배분 구조 변경 요구>다. 주식회사의 원리는 위험을 감수한 자본 투자에 대한 잔여 보상이다. 고

용이 안정적인 노조가 감수한 위험은 뭐가 있을까? 위험은 대부분 자본 투자자들 즉, 주주들이 감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주체가 사후적으로 개인·배분을 요구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기업은 투자 결정을 보류하게 된다. 사후적으로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전적으로 그 투자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노란봉투법 ... 같이 뜯어먹고 같이 죽자는 법

노동법과 정치의 결합은 제도적 리스크를 증폭시킨다. 한국 노동법은 이미 단체행동권과 경직된 고용 구조를 통해 노조 쪽에 거대 교섭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정치권이 <이익공유> 프레임에 뒷받침하면 <시장 메커니즘>은 약화되고 <정치적 분배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된다. 경제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익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신호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자본의 기대수익을 낮추고 투자 매력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흐름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우연이 아니다.

한 기업에서 시작된 <분배 구조 변화>가 전체로 번지는 도미노의 시작일 수 있다. 반도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산업에서 비용 구조의 상승은 곧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제 환경이다. 이런 전쟁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에서의 파업 가능성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할 수밖에 없다.

황당한 건, 외부 충격보다 내부 충격이 국가 경제를 더 위협하게 한다는 점이다. 그 내부 충격이 실은 이기주의의 소산이다. 한국의 거대 노조는 직업 간 차별만 보고 직업 내 차별엔 눈 감는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 노조 분열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삼성전자 노조원들의 공동교섭이 무너지고, 일부 노조원들은 <공동 대응 철회>를 선택했다.

성과급 잔치 끝나면 가위만 덩그러니...

보다 본질적인 건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이익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가>이다. 황금알을 낳기 위해 과정이 필요하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 낳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위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격>이다.

삼성전자 파업 논란은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제도적·정치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는 격>이 가위만 남을 것이다.

이양승 객원논설위원 / 교신대 무역학과 교수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5월 6일 게재되었습니다.